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성격연구: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

조 한 범 (통일연구원)

◆ 논문 요약 ◆

본 연구는 이미 통일을 이룩한 독일, 예멘, 베트남의 통일과정을 갈등관리의 차원에서 비교·고찰함으로써 남북한 통일에 보다 합당한 제반 여건과 갈등관리 방법들을 살펴보고 보다 효과적인 남북한 통일정책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는 개별 국가들의 갈등관리와 통일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각 사례들에서 나타난 갈등관리의 유형과 통일 유형 사이의 상관관계를 고찰하였다. 특히 본 연구는 분단국의 갈등관리 방법과 통일 유형을 각각 네 가지로 유형화하고, 이를 통하여 개별 국가들의 갈등관리와 통일과정을 고찰함으로써 어떤 갈등관리 방법이 남북한 통일과정에 보다 효과적일 것인가를 각 단계별로 점검하였다.

우선 흡수형 통일을 이룩한 독일의 경우 갈등의 예방과 타결, 해소관리를 통하여 장기적인 갈등관리가 이루어진 결과이며, 합의형 통일을 이룩한 예멘의 경우 단기적인 갈등관리가 상호간의 갈등을 완전하게 치유하지 못함으로써 통일 이후 또 다시 무력적인 방법으로 완전한 통일이 추진된 사례이다. 또한 무력형 통일을 이룩한 베트남의 경우 무력이라는 갈등관리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통일 이후 또 다른 내부적 갈등이 초래된 사례이다. 결국 우리는 이러한 개별 국가들의 갈등관리 방법과 통일에로의 전개과정을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남북한 분단의 갈등을 해소하고 통일을 이룩하기 위한 단계적인 갈등관리 방법과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I. 머리말

북한의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외부세계는 북한에서 나타나는 현상을 신기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김주석의 사망에 애도하는 북한주민의 긴 행렬을 바라보는 외부의 첫 번째 반응은 '인민들을 괴롭힌 지도자에 대한

비자발적, 정치적 동원화'였다. 그러나 단순한 의도적 동원화라고 하기에는 북한주민들의 애도는 자발적인 모습을 띠고 있었다. 따라서 김일성주석의 사망을 접한 북한주민들의 오열하는 모습과 깊은 슬픔에 쌓인 '북한적 현상'을 서방의 시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었다. 그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이었으며, 심지어 같은 사회주의권이었던 러시아인들도 북한주민들의 애도를 이해하지 못했다. 인민들에 대한 독재자이며 전례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의 장기간 통치로 오늘의 북한을 만든 김일성 주석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반응을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김주석의 사망에 대한 북한주민들의 애도는 외부인들에게 '자기들에게 고통을 안겨준 사람에 대한 애도'라는 이해할 수 없는 반응으로 받아들여졌다. 이는 북한을 '이상한 나라'로 보는 하나의 사례에 불과하다.

1953년 소련의 독재자 스탈린이 사망했을 때 소련인들이 보여준 태도와 북한주민의 반응을 비교해본다면 북한에서 나타난 현상이 더 이상 이상한 것으로 받아들여 질 수 없을 것이다. 스탈린체제하에서의 잔혹한 통치와 강압적인 사회주의체제 건설로 수많은 소련인들이 목숨을 잃었다. 그러나 스탈린 사망에 대해 소련인들은 깊이 애도했으며, 스탈린의 장례식 운구 때 수백만의 군중들이 스탈린의 마지막 모습을 보려고 붉은 광장에 운집했다. 소련인들의 애도는 1994년 평양에서 나타난 애도보다 오히려 더 큰 것이었으며, 광기에 가까운 것이었다. 스탈린에 대한 대중적 비판의식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체제상층부에서부터 시작된 스탈린 격하운동이 본격화된 이후였다. 따라서 1994년에 목도한 북한적 현상은 북한의 기이한 체제에 국한된 특수한 현상이 아니다. 유사한 체제와 유사한 상황에서는 유사한 반응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 심지어 사회주의체제와 다른 자본주의체제하 독재자의 사망에서도 우리는 같은 반응을 어렵지 않게 찾아낼 수 있다.

학문의 영역이나, 일반인들의 인식에서 북한에 대해 행해지는 가장 빈번한 평가는 '이상한 나라 북한'이다. 북한은 장기간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이라는 이데올로기의 마력이 지배하는 나라로 인식되어 왔다. 또한 사회주의의 몰락과 체제변화라는 시대적인 조류와 자신들의 구조적인 침체를 목도하면서도 유일지배체제와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는 북한의

모습은 북한이 자본주의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사회주의체제로부터도 떨어져 있는 특수한 사회로 보이게 만들어 왔다. 따라서 오래 전부터 북한은 남한내의 진보와 보수학계 모두에게 특수한 존재로 평가되어왔다. 오늘날 이는 '북한 특수주의'로 우리학계에 지배적인 패러다임으로 자리잡고 있다. 그리고 이 북한 특수주의의 중심에는 김일성과 주체사상이 자리잡고 있다. 따라서 김일성과 주체사상의 연구는 곧바로 북한연구와 동일시되어왔으며, 북한의 모든 현상을 설명해 내는 만능열쇠의 역할을 해왔다. 이 과정에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로서 지니는 일반적 특성들은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취급되어 왔다. 이와 같은 북한 특수주의는 북한연구에 대한 상당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객관적 분석과 평가를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그러나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침체는 사회주의체제제의 공통적인 한계에 기인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사회주의 공업화의 근본적 모순들은 북한경제의 구조적 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다.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으로 대표되는 북한체제의 특성은 '경제의 정치화'와 '정치의 경제화'라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특성을 나타내는 북한적 표현이었다.

북한이 구 사회주의권의 변화와 달리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강조하는 것은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설명하는 충분조건이 아니다. 북한 역시 대내적으로는 '우리식 개혁'을 위해 고민하고 있으며, 대외적으로는 제한된 개방이라는 방식을 통해서 남한을 포함한 자본주의 국가들과 교류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이는 북한이 체제상의 모순을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문제의 해결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변화가 북한체제의 급속한 해체와 직결된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 북한사회를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는 한반도 냉전구조와 남북한 통합이라는 현실적 변수에 의해 영향받기 때문에 다른 사회주의국가의 변화양상과 다소 다른 양상으로 진행될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II. 북한연구의 경향성

한국사회가 타 사회와 비교되는 상당한 특수성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사회를 지배하는 규정적 특성은 바로 자본주의체제라는 점이다. 한국의 자본주의가 미국과 유럽의 자본주의, 그리고 일본자본주의와 다소 다르게 보일지라도 한국이 자본주의체제로서의 특성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차이점에도 불구하고 자본과 임노동, 시장과 상품경제라는 자본주의의 핵심적 특성이 관철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적 차이들은 이와 같은 핵심적 특성들이 작동되는 방식의 차이와 정도의 차이로 본질적인 속성이 다름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를 연구함에 있어 연구자가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준비는 자본주의에 대한 개념의 정립이다. 연구자가 이를 가지고 있지 못할 경우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과 일반성은 혼재되어 버리며, 최종적으로 한국자본주의의 특수성이 부각되고 만다. 그것은 개념적 준거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필연적인 결과이다. 따라서 한국자본주의의 연구를 위해서는 연구자가 먼저 비교사회학적 관점에서 선행된 연구를 통해 형성된 자본주의에 대한 핵심적 개념에 대해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한국자본주의에 나타나는 현상은 대부분 한국적 특수현상으로 인식될 개연성이 높아지게 되는 것이다.

북한 연구 역시 북한이 사회주의체제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북한적 특수성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사적 소유의 철폐와 계획경제, 당-국가의 유일지배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사회주의체제의 기본적인 특성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연구는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에서 출발해야 한다.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과 특수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에 대한 연구와 사회주의체제에 대한 개념의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남한의 북한연구에 있어서도 비교분석의 방법을 비교적 충실히 따르는 연구들이 있으나, 이들이 북한연구의 주류를 이루어왔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 비교연구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에 하나의 기준을 적용하는 '비교발전론'과 사회주의체제간의 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비교사회주의론'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비교발전론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체제 모두 발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에 의해 평가될 수 있으며, 근대성의 개념이 양 체제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는 것으로 받아들인다.¹⁾ 따라서 이 관점에 의하면 사회주의적 외피 속에서도 개인주의나 물질주의, 그리고 사적 자율화와 같은 근대화의 필연적인 결과들이 나타나는 것으로 인식된다.²⁾ 즉 사회주의라는 1차 사회의 발전은 내부에 사회주의의 기초를 잠식하는 2차 사회를 필연적으로 생성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교발전론적 관점은 사회주의적 근대화와 자본주의적 근대화를 동일시하는 경향 때문에, 사회주의체제와 자본주의체제의 특성을 발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분석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체제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산업화와 ‘사회주의형 근대화’ 과정을 겪어 왔다. 따라서 발전이라는 동일한 기준으로 사회주의체제의 특성들을 포착하는 시도에는 우리가 따르게 된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결과는 자본주의와 다른 행위주체 즉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도출해 내며, 이들의 인성과 행위양태는 자본주의와 본질적으로 차이를 나타내게 된다.³⁾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연구를 위한 비교사회주의론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비교사회주의론적 접근은 북한연구에 있어 사회주의체제라는 일반적 개념의 중요성을 부각시킨다. 따라서 북한적 현상은 “사회주의 건설이라는 프로젝트가 북한이라는 저발전 사회의

-
- 1) “적어도 근대국가체제가 형성된 이후의 모든 사회는 목적 의식적으로 추구하는 발전의 상을 지니고 있다. 이런 점에서 ‘발전’이란 사회경제적 변화의 목적론적 성격을 전제하고 있으며 자본주의체제 및 사회주의체제 모두에게 적용 가능하다 ... 이를 자본주의 및 사회주의체제 모두에게 적용되는 근대성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경섭, “북한사회연구방법론: 비교발전론적 접근” (한국사회학 후기학술대회, 1995), p. 1.
 - 2) “북한에는 겉으로 보이는 전체주의적이고 이념적인 사회의 이면에 개인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사회가 성장하여 이중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서재진, 『또 하나의 북한사회』 (서울: 나남출판사, 1995), p. 6.
 - 3) 전성우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의 이념형적 규정으로 경제-사회적 관점에서 ‘공동체적 연줄인간’, 정치적 관점에서 ‘관료적 신민’을 제시하고 있다. 전성우, “동서독 통일과정의 사회학적 함의,” 김명수 이연택 외, 『북한사회의 이해』 (서울: 한양대학교 출판원, 1997), pp. 423~415. 이와 같은 특성은 자본주의적 근대화의 결과와 다른 것이며, 사회주의적 근대화의 사회·경제적, 정치적 결과였던 것이다.

내외여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며, “사회주의건설 프로젝트사 체내에 내장되어 있는 ‘유전적 법칙성’이 북한이라는 환경에서 합리적으로 구체화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⁴⁾ 바꾸어 말해 우리에게 북한적 현상이라고 받아들여지는 특성의 기저에는 사회주의체제라는 일반적 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적 현상은 더 이상 고유한 북한만의 특성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라, 타 사회주의체제가 적용한 ‘사회주의건설 프로젝트’의 적용과정과 이에 대한 북한 자체의 특성과의 결합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에 대한 진지한 학문적 연구가 시작된 이래 비교분석 특히 비교사회주의적 관점은 북한연구의 주변부에 머물러 왔으며, 중심부에는 내재적 접근법과 역사적 접근법이 자리잡아 왔다. 상호 연계되어 있는 이 두 가지 접근법, 내재적 접근법과 역사적 접근법은 북한연구에 대한 상당한 공헌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의 의도와 다르게 ‘북한 특수주의’를 재생산하는 데 기여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남한사회에서 북한을 연구하는 방법론들이 점차 다양화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으나, 아직도 지배적인 패러다임은 북한 특수주의라고 할 수 있다.⁵⁾ 많은 북한연구들은 북한을 유일지배체제와 주체사상이 지배하는 특수한 체제로 규정한다. 이와 같은 규정들은 사회주의체제로서 북한의 일반적 특성보다는 대체로 다른 사회주의체제와

4) “연구의 결론을 미리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북한적 현상은 ‘범사회주의적 현상’ 특히 ‘저발전 사회주의현상’이었다. 북한에 독특한 것으로 보이는 현상들의 실제에 있어서는 그 대부분이 다른 옛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나타났다 ... 저발전국가가 사회주의 건설을 시도할 때 각 나라는 대체로 공통된 문제에 직면했고 거의 동일한 조치들을 통해서 반응했다.”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서울: 연구사, 1994), pp. 5~6.

5) 박형중은 이를 ‘북한 특수성론’으로 개념화하고 있으며, 그 핵심요소로서 일인권력체제와 주체사상을 지적하고 있으며, 따라서 남한의 북한연구의 핵심질문이 북한체제를 규정하는 특수성이 어떻게 성립하였는가에 놓여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형중은 북한정치연구 분야를 대상으로 북한의 특수성을 부각시켜온 연구들을 전반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박형중, “북한정치연구,” 북한연구학회 엮음, 『분단반세기 북한연구사』 (서울: 한울아카데미, 1999). 그러나 북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논의들은 비단 북한정치연구 뿐만 아니라 남한사회의 북한연구 전반을 관통하고 있으며, 북한연구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점에서 ‘북한특수주의’로 개념화될 수 있는 경험적이고 논리적인 기초를 형성하고 있다.

구별되는 특성들을 강조하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북한연구에 있어 특수성이 부각되는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관련연구들이 대체로 내재적 접근법과 역사적 접근법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이다. 내재적 접근법과 역사적 접근법은 남한의 반공주의적 북한연구에 대한 '학문적 저항'의 성격을 가진 동시에, 반공주의적 북한연구의 한계를 극복하는 데 상당한 기여를 했다. 남한의 반공주의적 북한연구는 체제비교론에 기반하여 체제경쟁적 차원에서 북한을 정상궤도에서 이탈한 비정상국가로 파악해왔다. 이와 같은 연구는 북한의 비정상성의 부각을 중요하게 취급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접근법에서 북한의 정상성 회복은 북한체제의 근본적 변화와 아울러 이탈했던 정상궤도로 돌아오는 것으로 귀결된다. 이와 같은 시각은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밖'에서 즉, 시민적 민주주의나 자본주의의 척도로 분석한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론적 한계의 극복을 위해 "사회주의의 이념과 현실을 내재적으로 '안'에서부터 분석하고 비판하여, 사회주의 사회가 자본주의사회와 다른 이념과 정책의 바탕위에서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 사회주의 사회가 이룩한 '성과'를 이 사회가 이미 설정한 이러한 이념에 비추어 검토 비판해야 한다는 주장이 강력하게 대두"6)되었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내재적 접근법은 특히 '북한 바로알기'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으며, 이데올로기적으로 왜곡된 시각을 교정하는 데 긍정적 기여를 해왔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내적인 특수성을 부각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 내재적 접근론자들 역시 사회주의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조화로운 분석7)과 비교분석8)을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내재적 접근론자

6)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사회와 사상』 (1988. 12), p. 105. "북한은 사회주의 사회이고 사회주의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목적과 이념에 입각하여 북한의 사회현상을 설명하거나 비판하는 내재적 접근법을 중시해야 한다."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p. 32. 이종석은 송두울의 내재적 접근법과 차별화하여 '내재적-비판적 접근'을 내세우고 있다. 그리고 내재적 접근법과의 차이점의 근거로서 '안으로부터의 이해 이후 검토는 안으로부터 만이 아니라 바깥으로부터도 가능하다는 점'과, '내재적 접근을 통한 북한체제의 비판적 평가'를 들고 있다.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서울: 역사비평사, 1995), pp. 16~19.

7) "첫째, 북한 사회주의는 사회주의 일반, 즉 사회주의 보편성을 유지하고 있다는

들의 연구에 있어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을 분석하고 비교사회주의적 개념을 적용하는 연구를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오히려 연구자들의 이와 같은 전제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연구에 있어서 북한의 여러 현상들의 특수성들이 부각되거나,⁹⁾ 비교사회주의론적 설명이 결여되는 경우들을 쉽게

점이다. 북한을 사회주의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는 북한사회의 이해나 탐구가 불가능하다.”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서울: 당대, 1996), p. 27. “이러한 접근은 사회주의를 극단적으로 추상화하여 사회주의가 흡사 하나의 모델만 갖는 것처럼 보는 태도나, 반대로 사회주의 각 나라의 특수성만을 강조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지니고 있는 이념과 정책의 공통성을 부정하는 신 역사주의의 약점도 극복하며 사회주의 국가사이에 존재하는 일반성과 특수성의 양측면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있다.”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05.

8) “북한사회를 좀더 심도 있게 연구하고 이해하려면 다양한 비교방법이 요구된다. 비교방법은 크게 체제간의 비교와 체제내의 비교로 나눌 수 있다.”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p. 40. “상식적인 이야기이지만 특수성의 발견은 보편적 현상에 대한 광범한 관찰 및 같은 유 혹은 종과의 비교검토를 통해서 비로소 가능하다. 예컨대 북한의 주체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주체사상만을 읽어서는 안 된다 … 요컨대 비교분석은 뒤에 설명하는 구조분석과 함께 북한을 ‘특수한 것’으로 고립화시키고 다른 국제적 행위자들로부터 지나치게 차별화시키는 ‘북한 중심적 틀’을 극복하는 중요한 대안이 될 것이다.”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 21.

9) 사회주의 농업실패가 사회주의체제에 기원하고 있으며, 북한의 위기가 상당부분 농업위기로부터 기원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송두울에게 북한농업은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한은 여전히 집단적인 생산-분배단위(‘작업반-채산제도’)를 유지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농업생산을 유지하고 있어 후진국 농업발전을 위한 농업협동화 전략과 관련속에서 흥미있게 연구되고 있다. 즉 농업생산의 사회화 내지 집단화가 반드시 농민의 생산의욕을 떨어뜨리고 비 효율적이라는 주장에 대한 반증으로서 북한농업경제의 ‘성과’는 제시되고 있다.” 또한 송두울은 같은 맥락에서 중국, 소련과 달리 북한은 특징적인 도농격차 극복 발전전략을 구사하여 “도시와 농촌의 중간고리인 전통적 행정단위인 군을 강화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고수, 오늘 ‘과도도시화’문제에 고민하는 제3세계 국가의 지역발전계획에도 상당한 시사점”을 준다고 주장한다.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p. 112~113. 북한의 군단위 강화방침은 지역별 자립체제운영과 이를 위한 지방예산제 도입 그리고 지방의 산업육성책으로 뒷받침되었다. 그러나 이는 도농격차극복 발전 전략이라기보다는 한국전쟁의 영향으로 안보적 측면에서의 전략 시설 분산과 자립체제 구축효과를 의도한 측면이 컸다. 즉 전쟁으로 인한 중앙공업의 붕괴시에도 인민경제가 유지되어야 한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최진욱, 『남북한 행정통합방안』 (서울: 통일연구원, 2000), pp. 32~34. 실제로 북한이 도농격차해소에 성공했다는 근거를 찾기 어려우며, 북한주민들에게 평양은 선택된 사람들이 거주하는 선망의 대상일 뿐이다.

만날 수 있다.¹⁰⁾ 따라서 내재적 접근법에 기반한 북한연구들은 북한체제의 사회주의적 일반성보다 특수성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한 측면이 더 컸다.

내재적 접근법은 북한의 역사적 경험에 주목하는 역사적 접근법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내재적 접근론의 연구자들에게서 ‘역사상황적 접근’, ‘역사문화론적 분석 및 역사적 분석’¹¹⁾이나 ‘역사추상형비교방법’, ‘역사적 접근법 또는 역사적 분석’¹²⁾이 중요한 접근론으로 제시된다. 역사적 접근법은 대상의 분석에 있어서 그 대상의 역사적 경험을 주요한 설명요소로 삼는 접근법을 의미한다.¹³⁾ 따라서 이와 같은 접근법을 활용하는 북한연구자들에게 북한의 역사적 경험은 북한체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핵심

10) 북한 도자기 포장상태의 조야함에 대한 남한사람들의 평가에 대해 강정구는 다음과 같은 설명을 제시한다. “사회주의 경제 특히 북한의 경제는 교환가치가 아니라 욕구충족이라는 사용가치를 위한 생산으로, 소비를 조장하는 광고도 없거니와 선정적인 디자인, 화려한 색깔, 필요이상의 고급품 남용 등은 사회주의의 내적 논리와 배치되는 것으로 철저히 배격된다. 단지 도자기의 파손을 방지하는 본래의 목적에 걸맞는 포장이면 만족스러운 것이다.”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p. 33. 이와 같은 “강정구의 북한현실에 대한 내재적 해석은 자본주의적 또는 개인주의적 잣대에 따라 북한사회를 설명하고 비판하는 입장이 범하기 쉬운 오류를 극명하고 성공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평가된다. 강정인, “내재적 접근법에 관한 비판적 고찰,” 『동아연구』, No. 26, (1993), p. 31.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설명은 충분한 것이 되기에는 미흡한 점이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사용가치의 생산이라는 측면보다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체제가 가지고 있는 보다 근본적 특성인 결핍경제(shortage economy)의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사용가치 위주의 설명은 오래 켜두면 터지는 전구와 같이 ‘사용가치’를 실현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조야한 생산물과, 주요 생필품의 만성적 부족에 시달렸던 사회주의의 일상을 설명하기 어렵게 된다. 결핍경제는 사회주의기업들에게 만성적 원료의 부족상태에서 목표달성을 강요했으며, 이를 위해 생산품의 품질 희생은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또한 사회주의의 ‘공급자우선’ 경제체제에서 생산품의 품질은 부차적인 문제일 뿐이었다. 따라서 북한상품의 포장뿐만 아니라 상품자체는 사회주의 계획경제와 결핍경제라는 보다 근본적인 특성속에서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11)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 pp. 19~24.

12)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pp. 38~46.

13) “역사적 접근법은 모든 사회현상이 역사적 형성물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과거의 역사적 경험이야말로 현재의 사회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요인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모든 사회는 오로지 자신의 역사적 경험에 입각하여 분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는 것이 역사적 접근의 핵심이다.” 전상인, “북한 연구의 역사사회학적 접근,” (한국사회학 후기학술대회, 1995), p. 1.

적인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정치체제의 기원을 북한지도부의 만주항일무장투쟁의 경험에서 찾는 '유격대 국가론'¹⁴⁾이나, 북한의 고유한 역사적 유산의 영향을 근거로 한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¹⁵⁾ 등을 예로 들 수 있다. 이 두 분석에 있어서 중요한 핵심적 고리는 북한이라는 역사적 단위가 걸어온 고유한 경험이다. 따라서 북한의 국가체제는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으로부터 형성된 개념으로 설명되는 것이 아니다. 그 대신 와다 하루끼와 유격대 국가론과 브루스커밍스의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론은 '일심단결', '대가정', '충효' 등 북한에 고유한 전통과 경험들을 강조하며, 이 경험들을 결합한 전통적 국가관을 내세운다. 이 점에서 두 논의가 친화성을 가지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¹⁶⁾ 결과적으로 '소위 내재적 접근법은 역사적 접근법의 취약성을 보완할 수 있는 것'¹⁷⁾이라기보다는 북한체제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상승효과로 작용한 측면이 더 많았다.

그러나 북한 특수주의가 남한의 북한연구를 지배하게 된 데에는 방법론이 가지는 논리적인 차이보다는 연구를 수행하는 현실적인 문제점들도 도기인하는 바가 크다. 그것은 이미 지적했듯이 내재적 접근법과 역사적 접근법 공히 분석대상의 특수성을 부각시킬 수 있다는 점과 비교방법을 중

14) 와다 하루끼에 있어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역사는 김일성주석을 비롯한 이 나라의 많은 지도자가 참가한 만주에서의 항일무장투쟁, 항일 유격전쟁의 역사와 떼어놓을 수 없는” 것으로 인식된다. 와다 하루끼, 『김일성과 만주 항일전쟁』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2), p. 5. 따라서 유격대국가론은 와다 하루끼에 있어서 북한체제를 설명하는 핵심적 개념이다. “유격대원을 모델로 해서 이것을 전 국가적으로 확대시켜 김일성을 사령관으로 하여 전국민이 떠받드는 유격대 국가이다 … 그러나 디자인이 변해도 기본적인 것은 아무래도 유격대 국가의 형태라고 생각된다” 와다하루끼, “유격대 국가 북한의 성립과 전개,” 『극동문제』 (1993. 12).

15) 커밍스는 조합주의모형을 북한에 적용하여 북한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북한은 국가가 주도적으로 사회를 견인해낸다는 점에서 '사회주의적 조합주의'로 규정한다. 북한 조합주의의 구성요소로서 가부장적 특성, 공동체 지향성, 민족주의 등을 들고 있으며, 스탈린주의체제와 북한에 고유한 유교적 특성이 결합하여 새로운 체제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다. 브루스 커밍스, “북한의 조합주의,” 『한국현대사연구 I』 (서울: 이성과 현실사, 1982)

16) 이종석, “유격대 국가론의 성과와 한계,” 『한국과 국제정치』 10권 2호, (1994), p. 295.

17) 전상인, “북한연구의 역사사회학적 접근,” p. 4.

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방법론적 차원에서 이에 대한 보완의 필요성에 동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북한 특수주의의 형성은 방법론적 한계에 서 기인한 것이라기보다는 실제 연구에 있어서 편향된 연구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점에 기인한 측면이 더 크다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우선 남한의 북한연구가 정치학자들에 의해 주도되면서 연구영역 역시 북한의 지도자와 사상, 그리고 정치체제에 국한되는 현상을 보였으며, 주체사상 역시 통치이데올로기로서 정치적 연구로 다루어져왔다는 점이다. 현실적으로 대다수의 북한연구는 북한지도자와 사상에 대해 집중되었으며 이는 북한정치체제에 대한 설명이자 북한연구와 동일시되는 경향을 보였다.¹⁸⁾ 따라서 북한연구=북한정치연구라는 등식이 성립되고 말았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의 사회경제사에 대한 연구가 상대적으로 방기되는 것을 의미했다. 북한의 지도자와 사상, 정치체제에 대한 분석은 비교분석을 결여함으로써 자의적이든 타의적이든 북한 특수주의로 귀착되는 경향을 나타냈다.

북한연구에 있어 북한 특수주의가 일반화된 또 하나의 이유는 남한의 학계가 사회주의 연구를 하나의 영역으로 확정할 수 있는 시기를 갖지 못했으며, 따라서 북한연구 자체가 사회주의 연구가 되어버렸다는 점이다. 서구의 경우 오래전부터 소련학(sovietology)에 대한 광범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따라서 사회주의체제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고도 세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왔다. 물론 소련학이 사회주의체제의 지속성에 대해서 암묵적으로 동의했으며,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체제의 붕괴를 예측하지 못했다는 한계에 대해 많은 지적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소련학연구의 결과물들은 결과적으로 체제전환학(transitology)의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소련학은 사회주의 연구에 대해 풍부한 비교사회주의적 개념의 형성과 분석틀들을 제시해왔으며, 따라서 사회주의 국가의 일반성과 특수성의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해왔다. 또한 하나의 학문적 영역으로 자리잡았으며, 제도

18) 이와 같은 맥락에서 “김일성의 ‘영명하고도 자애로운 리더십’이 북한의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그와 그의 통치에 대한 연구는 곧 북한연구”가 된다. 서대숙 지음, 서주석 역, 『북한의 지도자 김일성』 (서울: 청계연구소, 1989), p. iv. 또한 “주체사상의 이해가 북한 사회현상 설명에 가장 중요한 관건”으로 제시된다. 강정구, 『통일시대의 북한학』, p. 31.

교육으로 흡수되어 있었다. 그러나 남한의 경우 냉전체제의 영향으로 소련학의 도입과 발전 및 교육의 제도화가 지체되었다. 한국자본주의모순의 심화와 정치적 독재체제는 소련학의 도입보다는 사회변혁이론으로서 마르크스주의의 도입과 확산을 자극했다. 따라서 남한사회에서 특히 1980년대의 경우 마르크스에서부터 알튀세에 이르기까지 좌파이론에 대한 논의가 그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을 정도로 활성화되었지만, 현실사회주의의 실제 모습을 보여주는 사회경제사적 분석은 찾아보기 어려웠다. 따라서 남한의 연구자들은 좌파이론에 대해 해박하면서도 사회주의의 실제 모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된 이중성을 지니고 있었다. 또한 현실사회주의의 붕괴는 사회주의를 과거로 치부하는 경향을 만들어 내었으며, 결과적으로 소련학에서 발달된 풍부한 비교사회주의적 개념들이 남한의 학계에 소개될 수 있는 입지를 축소시켜 놓았다. 따라서 북한연구는 오늘날 문자 그대로 '북한학'의 속성을 지니게 되었다. 이는 북한을 비교사회주의론이라는 큰 틀속에서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고립된 대상화'하는 것을 의미한다.

비교사회주의론적 관점에서 북한연구의 출발점은 북한이 사회주의 국가라는 점을 인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 국가에 관철된 일반성을 가지고 있으며, 북한의 특성으로 불릴 수 있는 현상들은 이 일반성과 북한이 사회주의 체제건설과정에서 처하게 된 조건과의 결합에 의한 것이라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사회주의체제의 일반성이 사상된 상태에서 북한이 처한 조건에 연구가 집중되는 것은 결과적으로 북한을 특수한 그 무엇으로 보이게 만드는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Ⅲ.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 한계와 북한

북한의 평가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전제는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이며, 따라서 사회주의체제가 가지는 일반적 특성과 근본적 모순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이다. 북한 역시 스탈린주의로 특성화되는 현실사회주의의 여정을 걸어왔으며, 사회주의 공업화와 이에 부합하는 사회구조를 형성시켜 왔다는 점이다.

사회주의 혁명이 완수되자 시급한 과제는 사회주의 이념을 실현할 물질

적 기초를 마련하는 일이었다. 혁명직후 사회주의 국가들의 공업화수준은 상당히 낮았다. 따라서 이들은 자본주의의 산업화수준에 접근하는 급격한 공업화를 필요로 했다. 그러나 이들이 가진 경제적 후진성과 사회주의체제의 특성은 자본주의와는 상이한 경로 즉, 사회주의 공업화라는 특수한 전략을 선택하도록 만들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추격발전론’으로 인식하거나 독특한 ‘사회주의적 생산양식’으로 인식하거나 결과적으로 전통적인 자본주의적 발전양식과는 근본적으로 다른 특성을 지닌 것이었다.

사회주의 공업화의 핵심은 ‘중공업의 계획적 발전을 통한 공업화’이었으며, 이는 스탈린주의 모델로 구체화되었다. 스탈린주의 공업화는 중공업우선주의라는 점에서 산업간 불균형적 발전전략이었으며, 양적 팽창에 주력하는 공업화를 지향하는 것이었다. 빠른 속도로 구현된 공업화는 생산주체들의 내적인 동기화와 자발성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동원화와 사회주의국가의 외적 자극에 의한 것이었다는 점에서 강제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다.

불균형적 전략은 농업부문에 대한 공업부문의 우선, 공업부문내에서도 경공업부문에 대한 중공업부문의 우선적 성장을 의미했다. 급속한 사회주의적 공업화라는 당면목표와 외부로부터의 자원유입이 불가능한 현실 앞에서 신생 사회주의국가들은 스스로 투자재원을 마련해야 했다. 이는 농업부문의 희생을 통해 공업부문에 자원을 집중시키는 사회주의 축적방식의 선택을 의미했다. 또한 급속한 공업화를 가능케 하는 자본재를 생산할 중공업부문에 집약적인 투자가 이루어 졌고, 이를 위해서 경공업부문은 희생되어야 했다. 공업화과정에서의 희생은 물질적 보상이 아니라 이데올로기의 구호속에 매몰되었다. 사회주의공업화를 위해 사회 전체는 거대한 동원체제가 되어 유일한 소유자이자 명령권자인 국가와 그 대행자인 당에 의해서 효율적으로 동원될 필요가 있었다. 즉 행정-명령경제체제는 노동력의 동원을 위해 효과적이고 강압적인 동원화를 시도했다. 급속한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생산요소의 양적 증가를 의미하는 외연적 성장에 주안점을 두고 진행되었다. 이를 기초로 사회주의체제는 자본주의가 걸어온 기나긴 공업화의 여정을 단축시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을 파국으로 몰고 갈 문제점들을 구조화시키는 것이기도 했다.

사회주의체제하에서 시장은 더 이상 주인의 역할을 담당하지 못했으며,

그 자리를 사회주의 국가가 대신했다. 노동자와 농민은 “공동 소유의 원칙”에 따라 생산수단과 생산물의 명목상 주인이었지만 이들이 소유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생산현장의 직접생산자들인 노동자들은 국가의 피고용인으로 변했으며, 복잡한 행정-명령체계가 경제를 관장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행정-명령경제체제는 구조적인 결함을 내포하고 있었다. 기업과 노동자들은 보다 적은 계획생산량을 할당받으려 노력했고, 반대로 보다 많은 원료와 장려금을 받으려고 노력했다. 경쟁체제가 없는 상태에서 사회주의 기업들은 과학-기술적인 진보에 대해서 거의 무감각했다.¹⁹⁾ 생산원료가 부족했음에도 불구하고 각 기업들의 원료은폐와 비효율성으로 낭비적인 경제메커니즘이 형성되었다. 소비자개념이 무시된 공급자 위주의 경제체제는 기업들이 생산품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능력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또한 사회주의 경제의 발전과정에서 형성된 방만한 경제체제는 밀도있는 집중체제로 전환되지 못했다. 이러한 모든 사실은 사회주의 경제체제가 생산의 효율성에 대해서 거의 전적으로 무관심했다는 사실을 의미했다.²⁰⁾ 이와 같은 사회주의체제의 구조적인 문제점들은 사회주의가 개혁의 길로, 더 나아가서 자신들이 이룩한 사회주의체제를 시장경제라는 대립적인 체제로 전환하도록 만드는 원인으로 등장했다. 이들에게 체제전환 이외의 다른 대안이 없었던 것이다. 이 점은 무엇보다도 사회주의 국가의 국민자신들이 누구보다도 명확하게 인식했다. 다시 말해서 사회주의체제는 변화할 수밖에 없었던 스스로의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일반적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북한은 중공업의 우선적 성장을 중심으로 하는 스탈린주의적 공업화 전략을 선택했다. 북한 역시 소련과 같은 저발전상태에서 스탈린주의적 공업화의 길을

19) 중앙집권적 행정-명령경제체제는 각 기업이 직접적으로 경제효율성 제고에 관심을 가지는 것을 방해했고, 이에 따른 위험부담을 감수하는 것을 막았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기업 지도자들은 새로운 가능성과 변화보다는 현상유지적인 안위를 택했다. 사회주의의 기업지도자들은 명령의 수행과 계획의 달성이라는 측면에서 기업가라기보다는 오히려 관료들에 가까웠다. 이들은 관료주의의 특성을 지닌 현상유지적인 동조형의 산업지도자들일 뿐이었다. Г.П. Черников, *op. cit.*, p. 141.

20) Ф.С. Весельков, *Нужная рыночная экономика, Введение в рыночную экономику* (СПб: Издательство СПбГУ, 1991), pp. 19~21.

걸었으며, 소련과 동유럽이 탈 스탈린화의 과정을 선택했을 때에도 스탈린주의적 정책기조를 유지했다.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과정은 스탈린주의의 공업화과정이 나타내는 일반적 특성들을 나타내는 것이었다. 북한 역시 사회주의 공업화의 일반적 특성인 사회주의적 기계제 대공업, 중공업의 계획적인 발전 방식을 받아들였지만 무엇보다도 자립성을 강조했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주의공업화란 “나라경제에서 공업생산의 압도적 우세를 보장하고 인민경제의 전면적기술개선을 실현하며 자립적체제가 선 현대적공업의 창설”이며 “사회주의공업화에서 중심은 기계제작공업을 핵심으로 하는 중공업을 창설”하는 것으로 규정된다.²¹⁾ 사회주의 공업화에 있어서 자립성은 특별히 강조되는 부분이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공업화는 곧 ‘자립적인 현대적 공업의 창설’²²⁾을 의미한다. 이는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단순히 공업·중공업의 건설로 보는 일반적 견해와 차별화 되는 것으로 주장되었다. 바로 이 자립성의 강조는 최근까지도 북한 사회주의 체제 건설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견해들의 주요한 근거로 활용되어왔다. 이와 같은 ‘자립적인 근대적 공업’의 건설을 위해 북한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공업화 방향을 설정한 것으로 주장되어 왔다. 첫째는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면서 동시에 경공업과 농업을 조속히 발전시킨다. 둘째 자금문제의 해결에 있어서 자력갱생의 원칙을 견지하고 국민경제 내부의 모든 예비와 가능성을 동원한다. 셋째, 사회주의 공업화를 극히 빠른 속도로 진행시킨다.²³⁾ 물론 이와 같은 세 가지 방향에 대해 북한과 북한측에 동조하는 입장들에 의해 성공적으로 목표가 달성된 것으로 평가되어 왔다. 그러나 이 방향성들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와 차별화되는 북한에 고유한 것이라고 평가하기 위한 실제적 근거는 충분치 않다.

첫째, 중공업의 우선적 보장과 경공업, 농업의 조속한 발전에 대한 주장

21) 『조선대백과사전』 (평양: 백과사전출판사, 2000), p. 116.

22) 따라서 북한의 사회주의적 공업화는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주체적인 공업화로선이 빛나게 관철된 결과”로 해석된다.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 289. 북한 경제의 자립성은 지속적으로 강조되는 명제였다.

23)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p. 87.

의 경우 북한의 “사회주의 공업화 노선은 경공업의 발전을 선행시키는 자본주의적 공업화의 방법과는 근본적으로 다를 뿐만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을 미루어 두고 중공업을 우선 발전시키는 종래의 사회주의 공업화의 방식과도 다르며 ... 북한의 공업화노선은 완전히 독자적인 노선”으로 주장되어왔다. 또한 북한의 중공업의 건설에 있어서도 단순히 “중공업만을 중공업건설이 아니라 경공업과 농업의 발전에 유용한 중공업 부문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었다고 주장되었다.²⁴⁾ 그러나 이와 같은 주장은 북한 공업화의 실제내용을 분석할 경우 근거가 충분치 않다. 소련과 달리 농업과 경공업의 동시발전 주장은 실제로 실현되지 않았으며, 소련과 마찬가지로 경공업에 대한 중공업 우선주의 경향이 북한에서도 재현되었다. 소련과 북한은 중공업과 경공업의 투자비율에 있어 거의 동일한 경향을 나타냈다. 농업에 대한 공업의 우선주의 경향이 북한에서도 나타났으며, 다른 사회주의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북한에서 농업이 특별히 빨리 성장했다는 증거도 찾을 수 없었다. 또한 생산재공업이 소비재공업과 연관이 없이 파행적으로 발전함으로써 경공업과 농업이 소외되었으며, 이는 중공업 우선적 발전으로 인한 산업간 불균형의 심화를 의미했다.²⁵⁾ 결과적으로 북한 공업화의 독특한 방향성이라고 제시된 첫 번째 주장은 달성된 것이라고 평가되기 어려운 주장인 것이다. 북한 공업화의 방향설정에 따른 고유한 특성이 발현된 것이 아니라, 북한 역시 중공업우선주의라는 사회주의공업화 일반의 경로를 걸어갔으며, 그 결과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이다.

24)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광주: 도서출판 광주, 1988), p. 89. 북한에 대한 내재적 접근을 주장하는 송두울도 북한의 공업화방식의 독특성을 지적한다. 송두울은 “사회주의건설의 측면에서도 북한은 여러 가지 점에서 소련이나 중국과 다른 길을 걸었는데, 가령 소련이 택한 농업의 희생위에 중공업 발전우선정책, 이것과 맞선 모택동의 농업기초위에 중공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략에 대하여 북한은 중공업을 우선적으로 발전시키면서 농업과 경공업을 동시에 발전시킨다는 전략을 세운”것으로 평가하며, 사회주의와 구별되는 북한 공업화의 독특한 측면을 강조한다. 송두울, “북한사회를 어떻게 볼 것인가,” p. 112.

25) 스탈린주의적 공업화가 초기 소련의 1, 2차 5개년 계획기 중(1928~37) 평균적으로 중공업에 81.5%, 경공업에 18.5%가 투자되었다. 1954년부터 1970년 시기 중 북한은 평균적으로 중공업에 82% 경공업에 18%를 투자했으며, 1970년대에 도 이와 같은 비율이 유지되었다.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pp. 32~37.

둘째, 자금의 자력갱생문제는 사실상 모든 사회주의국가가 처한 공통의 문제였다.²⁶⁾ 사회주의혁명 직후 자본주의제국들은 사회주의체제건설에 적대적이었으며, 심지어 군대를 파견해 내전과정에서 백군을 지원하기도 했다. 따라서 이들로부터 소련사회주의체제의 건설에 필요한 지원을 기대한다는 것을 불가능했다. 또한 최초의 사회주의국가라는 점에서 소련의 주변에는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다른 우호적인 사회주의국가도 존재하지 않았다. 즉 자본주의적 공업화과정에서 가능했던 외부로부터 자본의 유입이 봉쇄된 상태에서 소련 역시 자립적 공업화라는 문제에 직면했다. 그러나 북한의 경우는 다음의 인용문이 나타내듯이 이 문제가 보다 심각했던 것으로 주장되어왔다. “북한같이 식민지 농업국의 상태에서 사회주의로 들어섰던 여러 나라에서는 특히 복잡한 문제로 제기된다. 경제적 후진성 때문에 공업화에 필요한 자금이 극도로 결핍되었던 까닭이다.²⁷⁾ 덧붙여 북한의

26) “아주 뚜렷한 특징들이 소련의 산업화과정을 지배하게 되었다. 즉, 첫째로, 외국으로부터 자본재를 수입하여 중공업에서의 병목현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은, 인근자본주의세계가 소련에 대한 차관을 대부분 거부하기 때문에 실현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공식적인 무역관계가 확대되지 못하고, 수입의 초과를 차관도입으로 매우려는 방법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다. 따라서 산업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은 거의 국내의 자원으로부터 구할 수밖에 없었다.” M. Dobb,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서울: 형성사, 1989), p. 25.

27) 이와 같은 점이 북한만이 가지는 사회주의 건설의 특수한 조건일 수는 없었다. 공업화수준의 경우에도 광복직후 북한은 1917년 소련에 비해 상황이 열악하지 않았다. 모리스 돕의 러시아의 후진성에 대한 표현대로 “1917년 이전 러시아는 인도와 다를 바 없었으며,” 당시 러시아의 농업인구는 80%, 도시인구는 15%에 불과했다. 산업활동을 통해 생활을 영위하는 인구는 10%를 넘지 못했으며, 공장산업에 종사한 총인구는 2~3백만명에 불과했다. M. Dobb,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pp. 49~78. 북한의 경우 1946년의 직종별 분류를 보면 노동자가 12.5%, 사무원 6.2%, 개인수공업자·상인·기업가 5%, 기타 2.2%, 개인농민 74.1%이었다. 국토통일원, 『북한경제통계집』 (서울: 통일원, 1996), p. 111. 1946년 당시 총생산액 기준으로 북한의 공업과 농업의 비율은 28대 72였다. 조선중앙년감 편집위원회, 『조선중앙연감』 (평양: 조선 중앙 통신사, 1962), p. 322. 또한 일본의 식민지경영전략의 결과로 광복직후 북한에는 상당수의 공업 생산시설이 존재하고 있었다. 특히 중화학공업과 수력, 지하자원의 대부분이 북한지역에 편재하게 되어, 중화학공업의 경우 1940년 당시 80%가 북한지역에 분포되어 있었다. 당시 철광석의 99.9%, 유연탄의 99.5%, 무연탄의 97.7%, 전력의 86%, 금속공업의 88.5%, 화학공업의 82.7%가 북한지역에서 생산되었다. 이해주, 『한일비교경제사론-공업화의 역사적 전개와 그 특징비교-』 (서울:

경우에는 한국전쟁으로 인한 경제의 파괴, 제국주의 침략군과의 군사적 대치와 거기에 수반되는 군사비 부담의 증대, 국제공산주의 운동 내에서 수정주의의 대두 등 사정이 가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북한의 자력갱생의 문제의 해결은 “특히 철저하게 관철되었다”고 주장되어왔다. 자력갱생의 성공을 주장하는 근거로는 국내 자원의 최대한 이용과 합리적 이용, 국내축적의 증대, 농업축적의 이용 등을 들고 있다. 또한 ‘사회주의의 우월성’의 표시인 근로대중의 창의성과 적극성의 발현, 그리고 대중적 기술 혁신운동, 증산 절약투쟁, 노력적 지원 등도 자력갱생 성공의 원천으로 제시된다.²⁸⁾ 그러나 이와 같은 설명들은 실제로 북한의 공업화 초기과정에서 소련을 중심으로 하는 사회주의권으로부터의 원조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점에서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한국전쟁의 폐허를 재건해야 했던 북한에게 초기 공업화과정은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 시기중 소련이 제공한 무상원조는 북한 총투자액의 33.2%를 차지했으며, 사회주의국가들의 원조와 차관으로 세워진 산업시설들이 북한경제의 중추를 담당했다.²⁹⁾ 북한이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 비해서 특별하게 자력갱생에 성공했다는 주장은 적어도 북한 공업화의 초기적 상황에서는 타당하지 않은 것이다. 이와 같은 점들은 북한의 공업생산에 대한 사회주의 국가들의 원조가 기여한 정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더욱 명확해 진다.

셋째, 북한이 빠른 속도로 사회주의 공업화를 달성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이 없을 것이다. 1957년에서 1970년에 이르는 시기중 공업의 총생산은 11.6배 증가했으며, 공업생산의 연평균증가율은 19.1%이었다. 그 결과 공업의 비중이 1956년 34%에서 1969년 74%로 확대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 수치들은 북한에 우호적인 입장에서 평가된 것으로 북한 공업화속도의 예외성을 강조, 부각시키고 있다.³⁰⁾ 그러나 소

비봉출판사, 1983), p. 79. 따라서 사회주의체제형성 초기 북한은 소련에 비해 특별히 열악한 조건에 있지 않았다고 결론지을 수 있을 것이다.

28)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pp. 89~90.

29) 박형중, 『북한적 현상의 연구』, pp. 37~39.

30) “사회주의 공업화에 있어서 높은 성장률의 확보는 다른 나라에서도 보여지지만 북한에서는 그것이 특히 높고 더구나 공업화 전기간에 걸쳐서 그 수준이

런 역시 초기의 경우 상당히 빠른 속도로 공업화를 달성했으며, 이와 같은 과정은 외부인들에게도 '감동적인 경제발전'³¹⁾으로 표현될 수 있을 정도였다. 소련의 1차 5개년 계획기(1928~32년)의 공업성장률은 19.3%이었으며, 2차 5개년 계획기(1933~37년)의 공업성장률은 17.1%이었다. 이후 1953년 5차 5개년 계획기의 종료시점까지도 소련의 공업성장률은 연 13%를 상회했다.³²⁾ 따라서 북한만이 '예외적인 속도'로 사회주의 공업화에 성공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이 약하며, 북한이 최종적으로 소련과 같은 고도로 발달된 사회주의 공업국단계에 도달한 것도 아니었다.

북한의 공업화는 행정-명령경제체제를 통해서 유지되었으며 시장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관계가 경제관계를 지배했다. '경제관리에서 균중노선을 구현'한 대안의 사업체제는 북한에 독특한 공업부문의 관리형태로 주장되어 왔다.³³⁾ 1960년에 제기된 청산리방법을 계승, 1961년부터 시작된 대안의 사업체제의 특징은 기업소의 운영책임이 '지배인'에서 '공장당위원회'로 교체되었다는 점이다. 모든 생산활동을 지휘, 감독하는 공장당위원회는 당간부, 행정간부, 지배인, 기사장, 기술자, 근로자 대표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북한의 표현대로 '정치사업'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경제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이는 계획경제체제하에서 자발성을 상실한 생산주체들은 자극하고 동원하기 위한 사회주의적 방식에 다름이 아니었으며, '정치

계속 유지되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현대조선문제강좌 편집위원회, 『북한의 경제: 사회주의 조선의 경제』, pp. 90~91.

31) M. Dobb, 『소련경제사』, p. 26.

32) 극동문제연구소, 『소련·동유럽총람』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9), p. 177. 서방의 학자들은 사회주의국가들이 체제선전의 목적으로 공업생산량의 증가에 대해서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믿었으며, 이를 비판적인 방법으로 재구성하여 수정치를 내리는 시도들이 행해졌다. 폴린 클라크 역시 이와 같은 점에 주목, 1928년에서 1937년까지 10년간 소련의 공업생산량 증가율을 재평가, 소련 '통계의 거품'을 걷어내었지만, 이와 같은 비판적인 방법으로도 소련이 연 14%의 증가율을 기록했다는 데 동의할 수밖에 없었다. M. Dobb, 임휘철 역, 『소련경제사』, p. 294~295.

33) "대안의 사업체제는 청산리 정신, 청산리방법의 요구대로 정치사업, 사람과의 사업을 기본으로 하여 경제를 관리운영하는 혁명적인 사회주의경제관리방법이다". 당정책해설도서편집부, 『위대한수령 김일성동지의 로작 용어사전』, p. 181.

의 경제화'와 '경제의 정치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³⁴⁾ 즉 시장과 경제적인 동기가 상실된 계획체제에서 생산활동에 필요한 요소들은 비경제적이고 외적인 자극에 의해서 동원되어야 했던 것이다. '정치사업'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서는 국가의 권위는 절대적이어야 했으며, 당은 '선택된 사람들'을 인도하는 선지자'로서 언제나 합리적인 판단을 하는 것으로 비추어 졌다. 김일성은 의인화된 권위의 결정체로 등장했다. 김일성이라는 개인이 절대적인 권위의 행사를 통해서 사회구성원들의 공통의 이익을 구현하는 것으로 선전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었다. 근로대중에게 물질적인 보상을 해주지 못하게 됨에 따라서 '집단과 조국을 위해서 봉사하라'는 구호는 더욱 더 강조되었고,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은 심화되었다. 이 과정은 유일지배체제의 확립과정과 결부되어 주체사상이라는 '신성불가침의 교의'를 탄생시켰다. 또한 당국가의 권위와 권위의 극단적 의인화의 기저에는 국가차원의 테러라는 보다 직접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이 자리잡고 있었다.

그러나 북한이 사회주의적 공업화를 달성할수록 동시에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을 심화시키는 것을 의미했으며, 사회는 점점 더 탄력성을 잃어갔다. 따라서 북한에서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위기가 악화될수록 사상에 대한 의지가 심화되고 전투적인 사회분위기가 강조되었지만 문제의 본질적인 해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었다. 결국 북한경제의 구조적인 한계점들은 식량위기라는 극단적 상황으로 귀결되었다. 동시에 주민들은 주체사상의 마력이 자신들의 생존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는 점을 자각해 나갔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공업화의 과정은 소련경제를 파국으로 몰고 간 행정-명령경제체제의 치명적인 결함들, 즉 모든 생산주체들의 축소 지향적 생산활동, 낭비적 메카니즘, 생산성 향상에 대한 구조적인 무능력, 내포적 성장의 실패 등 동일한 특징들을 수반했다.

34) 정치적 요소를 통해 경제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상황은 모든 사회주의국가에 일반적 현상이었다. “자본주의체제에서는 정치영역은 비록 일부 중첩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경제영역, 즉 비즈니스의 세계와 특징적으로 구별된다. 그러나 정치적 요소가 경제를 지배하는 전통적인 사회주의체제하에서는 정치와 경제간의 그 어떤 구별도 존재하지 않는다.” Janos Kornai, *The Socialist System*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1), pp. 124~125.

IV. 북한체제의 현 단계와 변화

동구 러시아를 비롯한 구 사회주의권이 전반적으로 시장경제를 지향하고 있다는 점에 비추어 북한이 아직도 '우리식 사회주의'체제를 추구하고 있다는 점은 다소간 의아스럽게 여겨지고 있다. 세계적인 냉전체제의 해체와 사회주의체제의 붕괴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아직도 공식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은 이를 가능케 하는 북한의 내적인 특성들을 주목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따라서 관련 연구들의 상당부분은 북한체제의 생존에 주목하고 이를 가능케 하는 요인이 분석에 주력하는 경향을 보여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접근에 있어서 지적되어야 하는 점은 사회주의체제의 해체로 이어진 체제의 근본적 위기요인들을 북한 역시 가지고 있다는 점과 따라서 북한을 통합상태가 양호한 '정상국가'로 볼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폐쇄적이고 독재적인 정치형태를 가지고 있는 체제의 분석에 있어서 정치분야는 체제의 안정과 통합과 동일시되는 경향을 종종 나타낸다. 그러나 체제의 통합상태는 단일차원보다는 다양한 차원에서 규명될 경우 분석력이 높아질 수 있다. 체제의 통합상태는 체제의 각 분야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며, 정치분야의 통합상태가 체제의 내구력을 나타내는 단일 지표로 해석될 경우 정확한 분석이 어려울 수 있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체제를 근간으로 하는 북한은 사회주의체제상의 구조적인 모순들을 지니고 있으며, 이는 변화를 통하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북한 식량사정의 호전이나, 김정일체제의 안착 등으로 북한체제의 안정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북한의 체제안정성은 주로 정권의 안정성과 동일시되어 평가되어 왔다. 김정일정권이 정착하면서 북한체제의 불안정성도 약화되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북한의 현 상황은 위기구조의 만성화에 따른 내성의 증가로 해석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점에서 일부 연구자들이 지적하고 있는 북한체제의 안정성과 북한의 사회통합수준의 경우 몇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체제의 사회통합과 체제의 안정성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적 차원으로 나누어 분석될

필요가 있다.

정치분야의 경우 김일성 사후 김정일체제의 안착과정에서 별다른 충돌이나 권력갈등이 없었다는 점에서 통합의 수준이 비교적 높게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전체로서의 권력 엘리트도 분화하거나 갈등상태에 놓여 있다고 보기 힘든 만큼 정치적 차원의 통합은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김일성주석에 비해서 김정일위원장의 정치적 장악력이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다는 점, 특히 카리스마의 경우 현저하게 약하다는 점은 정치적 통합의 유지에 부정적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 또한 김정일체제의 유지는 핵심적 지지기반의 유지에 기초하고 있다. 식량위기중에서도 북한의 지배집단과 물리적 억제력을 보장하는 군대와 보안요원,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평양과 인근지역에 대한 배급은 타 분야에 비해 우선적으로 유지되었다. 이는 결과적으로 북한사회의 양극화 즉, 상하층간의 갈등구조를 야기했으며, 동시에 이는 북한체제의 상층부에 대한 적대감 형성과 신뢰성의 약화를 의미한다.

경제부문의 경우 통합상태가 낮으며, 부분적으로 이완상태가 발생하고 있다. 정상가동이 가능한 분야가 군수산업에 국한될 정도로 산업생산분야는 상당히 심각한 상황에 놓여 있다. 총체적인 경제위기로 인해 북한의 산업은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본적인 에너지위기의 문제조차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동시에 경제관리분야에 있어 북한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모순심화로 중앙집권적 경제체제가 와해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또한 북한의 통제경제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배급체제가 수년간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도 중요하게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주민들에게 공식경제에 대한 심각한 불신을 야기했으며, 지하경제와 생존경제 확산의 촉매제로 작용했다. 지하경제와 생존경제의 확산은 다시 공식경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따라서 경제부문의 통합은 상당한 수준으로 이완되어 있다고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사회부문의 통합수준도 경제부문에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만큼 높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장기간의 식량위기는 북한사회통제의 근간이었던 주민의 이동통제를 사실상 무력화시켜 버렸다. 식량위기는 생존의 문제를 각 가정의 문제로 만들었으며, 가정내에서도 식량을 구하기 위해 남편과

아내, 자식이 각각 뿔뿔이 흩어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다. 이는 사회의 기본단위인 가족의 해체로 연결되며, 북한사회의 기초가 약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식량위기는 국유재산의 절취나, 절도, 강력범죄 등 사회적 일탈의 급속한 증가를 야기했다. 기아에 직면한 주민들이 식량을 구하기 위해 도시에서 농촌으로, 북한에서 중국접경지역으로 이동하기 시작했다. 북한당국은 현실적으로 엄격한 사회통제를 실시할 자원을 가지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탈북자의 급증에서 확인될 수 있으며, 특히 재탈북 또는 기획탈북까지 가능한 상황을 고려할 때 북한당국의 대응력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³⁵⁾

문화적 통합수준도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생존권이 의심받는 상태에서 충성의 강요와 이데올로기적 통제는 권위를 상실하게 된다. 체제의 내구성에 대한 의심의 증가는 공적 권위에 대한 냉소와 부정의식으로 연결될 개연성을 가진다. 시민사회의 부재와 반체제세력의 체계적 동원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가시적 체제부정행위가 발생하지는 않지만 주민들의 의식구조에는 체제에 대한 냉소와 공적 권위의 거부가 점차 싹트기 시작한다. 이와 같은 변화는 비가시적이지만 장기적으로는 북한체제의 기초를 침식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³⁶⁾

35) 폐쇄성이 높은 북한체제유지의 핵심은 강력한 사회통제와 국가차원의 폭력적 테러의 활용이었다. 그러나 북한이탈주민의 문제는 북한이 과거의 강압적 사회통제에 실패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북한이탈주민은 체제위기의 지표이자 심각한 인도주의적 사안으로 이미 중국에서 국제이슈로 비화하고 있으며, 관련 NGO는 물론 세계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따라서 비상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 ‘탈북’이 지속되는 한 정상국가로서 북한의 위상의 확립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북한은 북한이탈주민 문제에 있어 ‘배출요인’을 제거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사회통제를 통한 탈북방지도 실패하고 있다. 또한 북한으로 이송된 탈북자의 재탈북, 또는 기존 북한이탈주민가족의 기획탈북 등을 막지 못하고 있다. 이는 북한의 사회통제력의 근본적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며, 평양을 중심으로 하는 핵심지역과 부문을 제외하고는 관리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는 것을 말한다.

36) 사회주의의 주입식 교육과 전체주의적인 통제에 대해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방어유형들을 발전시켰다. 이러한 방어유형들은 법률에 대한 무시, 규칙에 대한 제도적인 회피, 권위에 대한 불신, 전통에 대한 강조, 서구에 대한 막연한 동경 등이 포함된다. 결과적으로 사회주의사회는 겉으로 굳건한 통합을 유지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문화적인 기초를 상실해가고 있었다.

따라서 북한의 현 사회통합수준은 정치부문을 제외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 상태에 있지 못하다고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정치부문을 제외한 분야의 통합수준이 낮은 것이 단기간에 북한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시민사회요소의 미발달과 정치적 저항의 조직화가 가능하지 않은 북한의 상황에서 비정치적 부문의 통합수준 약화는 장기적 차원에서 변화로 이어질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현 단계는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위기로 인한 체제와해기의 초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탈 사회주의 체제변화의 보다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체제와 와해되어 가는 과정인 와해기(erosion)와 시장경제체제로의 공식적인 전환하는 체제전환기(transition)로 나누어 볼 필요가 있다. 사회주의체제의 변화는 와해기에 사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개인들에 의해서 밑으로부터 시작되며, 체제전환기는 위로부터 그리고 시장경제형성을 목적으로 하는 입법화 등 공식적인 과정을 통해서 시작된다. 와해기에 국가는 사적인 부문을 억제하거나 일시적인 양보를 할 뿐이다. 그러나 체제전환기에 국가는 시장경제를 위한 법과 제도를 만들며, 이와 같은 조치들은 사적 소유권을 보장한다. 사회주의 시기 동안에도 사적인 경제영역들은 존재했으며, 종종 '제 2경제'라는 개념과 결부되었다. 그러나 국가의 엄격한 통제와 제약으로 사적인 경제영역은 제한된 형태로 존재했다. 사회주의체제 와해기의 초기에 국가는 사적인 경제영역을 소비부문으로 제한한다. 따라서 사기업가들은 상품과 서비스를 소비자들에게 팔고 원료 역시 소비자가격으로 구매해야 했다. 국가는 사적 영역과 국유화된 영역간의 엄격한 장벽을 설치함으로써 두 영역간의 자원, 노동력, 기술의 흐름을 차단했다. 그러나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가 심화되면서 사적 경제영역에 가해졌던 제한조치들이 해제되거나 완화되고 새로운 사적영역들이 창출된다. 그리고 이와 같은 상황은 '제 1경제'에 속한 사람들을 '제 2경제'에 참여시키는 자극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이 시기에도 아직 사적 경제영역의 중요한 요소들이 국가의 통제하에 있고, 관료들의 사적 경제영역에의 참여도 금지되고 있었다. 체제

이는 탈 사회주의체제의 '무혈혁명'적 특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다. 조한범, 『체제전환기 러시아의 사회상 연구』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 15.

전환기는 경제의 사적 부문과 국가부문 사이의 장벽을 제거하며 두 부문이 동등한 자격을 가진 것으로 간주된다. 사적경제영역의 전반적인 확산은 관료들에게 위기와 기회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지니게 된다. 따라서 시장경제화가 심화될수록 관료들의 사적 경제영역에의 참여는 증대하게 된다. 체제전환기에는 두 가지 사적 영역이 존재한다. 첫째는 전통적인 부문으로 와해기에 나타났던 추세가 지속된다. 두번째는 국유재산의 사유화와 사기업가의 합법화를 통해서 대규모의 형태로 진행된다.³⁷⁾ 사회주의체제의 와해기의 경우 사회주의의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기존체제유지에 노력하며, 변화는 밑으로부터의 자연발생적 특성을 띤다. 그러나 체제전환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경우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지위가 불안정해졌다는 것을 인지하며, 따라서 새로운 체제에 맞게 자신들을 적응시키기 위해 본격적으로 노력하기 시작한다.

북한의 경우 체제와해기의 초기적 단계에 있는 것으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이는 지배집단차원에서 위기의식을 인지, 해결방법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전반적인 처방은 체제 내적인 지향성을 지니게 된다. 따라서 북한은 1990년대 이후 위기과정에서 발생한 정치, 경제, 사회문화적 체제이완을 복구함으로써 정상체제로 복귀하는 것을 시도해왔다. 경제난과 식량난으로 고통받던 '고난의 행군시기'(1996~97년), '사회주의강행군시기'(1997~98년)는 200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 창당 55주년을 맞아 북한에서 공식적으로 종료가 선언되었다. 이는 북한 식량위기의 완화와 체제안정성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 왔다. 그러나 고난의 행군과 사회주의 강행군의 종료는 북한경제의 근본적 위기의 해소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북한경제의 문제는 사회주의공업화 자체에 기인한 것이며, 이 문제가 식량위기라는 극단적 형태로 나타난 것이다. 따라서 식량문제의 상대적 호전이 근본적 위기해소의 지표로 해석되기는 어렵다. 북한에서 농업위기에 대한 근본적 처방이 적용되었다는 증거도 찾기 어려우며, 식량위기의 완화는 자연재해의 상대적 감소와 외부로부

37) Akos Rona-Tas, "The First Shall Be Last? Entrepreneurship and Communist Cadres in the Transition from Socialism," *AJS* Vol. 100, No. 1 (1994), pp. 47~51.

터의 식량지원, 그리고 식량위기에 대한 내성 강화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 또한 사회주의 공업국가 북한에 있어 보다 중요한 공업부문에서 근본적이고도 효율적인 조치들이 취해지지 않았으며, 생산회복이나, 공장가동의 정상화 조짐도 보이지 않고 있다. 북한이 체제복구의 노력을 시작한 것은 북한 사회주의체제의 근본적 위기가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정일체제의 안착과 미약하나마 북한경제의 상대적 호전이라는 현상의 결합에 기인한 것이다. 물론 이 과정에서 대외변수 특히 실리추구를 위한 대남관계개선이 일정한 역할을 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³⁸⁾

북한의 안정성회복은 전반적인 체제차원의 회복이라기보다는 정권차원의 기본적인 통제능력의 회복수준이라는 점이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은 대외적으로 다소 파격적인 '교섭'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는 취약해진 체제에 대한 외적 위협의 감소와 체제유지에 필요한 필수적 자원의 외부로부터의 유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미국의 패권주의가 관철되는 상황에서 북한은 과거와 같은 대립구도의 유지에 필요한 자원의 투입이 불가능해지며, 이는 외부의 위협을 감소시키기 위한 북한지도부의 노력을 자극하게 된다. 이와 같은 점에서 북한의 북·일관계 개선노력이나 북·미 불가침협정 요구는 단순한 상징적 차원을 넘어 북한체제의 생존노력과 직결되어 있다는 의미를 지니게 된다. 대외관계개선은 북한의 체제복구에 필요한 정치, 경제, 사회적 자원의 북한유입을 용이하게 한다. 이는 북한이 체제내의 파급효과가 큰 개혁보다 손쉬운 부분적 개방을 통해 정상체제로의 복구를 위해 필수적인 자원을 확보하려는 전략을 구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와 같은 필요성은 사회주의 국가들의 붕괴에 따라 사회주의권내의 경제협력과 무역관계가 붕괴되었다는 점에 의해서 강화되었다. 따라서 북한의 경제침체가 나타나면서 대외분야에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³⁹⁾ 북한의 대외관계개선 노력은 남한의

38) 김성철·조한범 외, 『북한경제전환 모형: 사회주의국가의 경험이 주는 함의』 (서울: 통일연구원, 2001), pp. 156~163.

39) 북한에서 대외경제사업 및 무역 확대 발전방침 채택, 합영법 제정 공포 등 경제적 대외개방에 처음으로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은 제2차 7개년계획기(1978~84)였다. 대외개방의 문제가 보다 강조되어 나타난 것은 제3차 7개년계획기(1987~93)이며, 경제발전의 핵심요소로 기술혁신을 강조하는 한편 이를

대북포용정책이라는 변수와 친화력을 일으켜 남북관계진전으로 연계되어 왔다. 이는 북한이 미국을 비롯한 대외관계에 있어 불필요한 대립구도를 야기하기보다는 관계개선이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북한의 정상체제로의 환원은 1990년대 위기 이전 사회주의체제로의 복귀를 의미하는 것이며, 사회주의체제에서 기원된 근본적 문제의 해결이 아니다. 따라서 북한이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확보한다고 해도 단기적 효과에 그칠 것이며, 체제의 모순은 더 심화되어 가게 된다. 또한 제한된 개방이라 하더라도 북한체제내에 상응하는 변화를 동반하게 된다.⁴⁰⁾

북한에서의 변화는 비교적 장기간에 걸쳐 순차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즉 근본적인 변화를 의미하는 체제전환기의 도래는 상당기간동안의 사회주의체제 와해기를 전제로 할 것이다. 현재 북한의 상황으로 보아 단기적으로는 정권내의 변화를 넘는 체제상의 변화는 가능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는 북한의 급작스러운 붕괴와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논의와 맥을 같이한다. 이와 같은 주장의 논거는 북한이 적어도 현재상태로는 외적인 통합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며, 보다 중요한 사실로서 현 지배체제에 대한 체계적인 저항세력 및 대체세력이 형성되지 않았다는 점에 기인한다. 경제적인 침체에 따른 식량폭동과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체제나 체제변화의 전망을 가지지는 못할 것이며, 이는 지배체제내에서 변화를 자극하는 제한된 요소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따라

위한 방법으로 무역과 대외 경제협력의 확대·발전을 강조했다. 실제로 북한은 1991년 두만강개발계획 추진과 관련하여 '나진-선봉 자유경제무역 지대' 개발 계획을 발표, 대외개방면에서의 변화를 나타냈다. 또한 3차 7개년계획기 실패에 따른 완충기(1994~96)에도 대외분야의 강조가 나타난다. 북한은 1993년 당 중앙위원회 제6기 21차 전원회의에서 예외적으로 제3차 7개년 경제계획기의 주요 목표들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인정하고, 3년간의 '사회주의 경제건설의 완충기'를 설정했다. 완충기에 제시된 경제전략으로 '농업 경공업 무역제일주의'를 제시, 대외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드러냈다.

- 40) 북한의 대외관계개선 및 남북관계개선 노력은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생존력을 강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정치적 통합상태를 이완시키는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은 남북통일과 제국주의세력과의 대립을 체제유지 및 공식적 명분으로 삼아왔으며, 북한의 비상체제를 정당화시켜온 논리였다. 남북관계개선과 대외관계개선은 중장기적으로 이와 같은 논리를 약화시키며, 따라서 체제정당화의 명분을 약화시키게 된다.

서 유혈사태를 수반하는 긴박한 상황의 도래도 최악의 경우 지배체제내에서의 권력교체라는 형태를 띠게 될 것이며, 구조적인 변화와 직결되기는 어렵다고 보여진다. 이 과정에서 비조직적 돌발적인 사태를 제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물리적 통제기구, 즉 군부와 보안조직에 대한 장악세력은 우선권을 가지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과정은 궁정쿠테타의 형식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크며, 결과적으로 엘리트집단내의 권력교체성격을 넘어서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궁정쿠테타가 성공한다고 해도 체제의 문제가 본질적으로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구조는 만성화되어 갈 것이며, 이는 북한내부의 부문별 통합상태를 점차 이완시키는 작용을 하게 될 것이다. 또한 권위의 의인화가 극도로 강화된 북한정치의 특성상 새로운 정권은 김일성과 김정일에 상응하는 카리스마를 가질 수 없으므로, 집단지도체제의 특성을 띠게 될 것이다. 이 경우는 신권화된 북한 정치권력과 권위의 세속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엘리트간의 정권교체는 사회적 저항의 상쇄를 위해 상응하는 가시적 개혁조치와 획기적 대복지원을 전제로 한 대외관계개선에 나서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결과적으로 북한의 변화는 점차 체제차원에서의 변화의 특징을 지니게 될 것이다.

V. 맺음말

북한의 경제체제는 동구와 러시아간의 긴밀한 분업구조에 포섭되어 있지 않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웠다. 따라서 북한은 사회주의권의 붕괴로부터 오는 충격을 비교적 작게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사실이 '우리식 사회주의'의 자립적 생존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북한체제의 구조적인 한계를 고려했을 때 현재의 위기침체상태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혁과 개방 이외의 현실적인 대안은 없으며, 그 방향성은 시장화의 지향이다. 다시 말해서 북한이 현재와 같은 체제내의 개혁을 추구한다고 하더라도 궁극적인 위기의 해소에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사회주의체제의 전반적인 변화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동일한 속도와 양태로 변화가 포착되지 않는 것은 북한이 체제상의 특수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북한이 처한 대내외적인 조건들이 북한변화의 속도

및 범위, 그리고 방향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북한이 단기적으로 사회주의체제를 유지하면서 위기를 완화하는 데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이는 궁극적인 체제전환의 맹아들을 동시에 싹틔우는 과정을 동반하는 것이 된다. 북한의 위기는 사회주의라는 체제에서 기원하는 것이기 때문이다.